

이태원 참사 반년 지났지만...국회 통과 재발방지법안 6건뿐

행안부 안전차관 주재 5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40여건 중 8건 국회계류...상당수 의원입법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통과한 재발방지법안은 고작 6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5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

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5개 전략 총 65개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는 40여 건이다. 이 중 올해 들어 6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장 인과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피해 지역의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8건이다. 주위·주관이 불명확한 축적·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나머지는 법률안 개정 작업이 진

행 중이다. 이 중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은 25건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근거를 담은 등 법안이 해당된다. 그 외에는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입법과제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발공된 입법과제 외에도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종합대책의 많은 세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과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기본이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파란하늘 아래 운동회 3일 서울 동작구 본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본동 놀이 한마당'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슈퍼볼 나르기를 하고 있다.

'해외직구 639900원 결제' 문자...전화하니 보이스포싱

해외결제·청첩장 등 미끼 문자

'해외직구 결제 639,900원 결제 완료, 아님 시 고객센터 신고 070-0000-0000' 해외결제, 택배 미수령 확인 요청 등 교묘한 미끼 문자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 1751건, 이 가운데 '기관 사칭형'이 1108건(6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화금융사기의 70~80% 가량은 '대출 사기형'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기관 사칭형이 이를 앞서는 모습이다. 또 최근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불법 정 다수에게 미끼 문자를 뿌리고 회신을 유도

하는 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졌다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놀라 전화하면 금융기관 고객센터를 사칭해 '본인이 직접 취소해야 한다'며 인터넷주소(URL)를 알려주는 식이다. 하지만 이를 누르는 순간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이 담겨 받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이후 범인들은 다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악성 앱 때문에 아들이 거는 전화는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공식 번호로 표시된다. 특히 교묘하게 조작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공문서까지 활용하면서 다수 사람

들이 형사절차 경험이 없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 원격조종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결제는 물론 'OOO님 결혼 청첩장' 등 미끼 문자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 분담금을 이용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무실에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대형화재로 통신상태가 불량하니 불려주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착신 전화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한 뒤, 범인들이 조합원들 전화를 받아 아파트 옵션비를 챙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회사에서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든지 모르는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5·18유공자 공직 썩쓸이' 광주시, 허위사실 강력 대처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가점 취업자 1.2%

광주시는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썩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가 하면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까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

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5·18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5·18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15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광주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5·18 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라도 5·18가짜뉴스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